



파병 반대 운동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연결하기

8~10면

극우로 기우는
세력균형

11면

지배계급을
설득할 수
있을까?

12, 13면

"노무현 탄핵
전조" 같다는
김민석

13면

AI CEO들이
부추기는
'AI 종말론'의 저의

15면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인터뷰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 정책에 대해 16면



자업자득, 자승자박, 인과응보, 자초하다, 뿌린 대로 거두다, 제 무덤 제가 판다 ...

이재명 정부 위기에 불일 수식어들이다

관련 기사 2, 4~8, 11, 13, 16면



※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 호 종이 신문은 9월 30일에 발행됩니다. 그 사이에도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파병 반대 2차 집회와 행진

이란 전쟁 파병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참전 말라! 트럼프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주최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가) | 문의 010-7550-2131

9월 18일(금)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 집회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 ※ 영어 통역 제공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한국 자본주의를 대변해 참전 찬성할 것이 확실하다

사진출처: 국민의힘

이란 전쟁 참전

대놓고 파병 재촉하는 국힘,
‘장고’ 시늉하는 민주당

김중환

국민의힘(이하 국힘)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파병 결정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은 “동맹의 경고를 받고서야 허겁지겁 움직이는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뒷북치기에 불과하다”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윤상현은 “호르무즈 파병해서 미국 환심 사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는 파병이 “기회”라고 해 대놓고 파병을 촉구했다.

국힘 정치인들은 정부의 파병 검토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비판하면서도 당론으로 ‘파병 찬성’을 정하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그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국힘의 전신)은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때 추가 파병 동의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해 놓고도, 김선일 씨 피살 때는 정부만 추궁했다.

국힘은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기운 바 있다. 윤석열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기여를 강조했다. 한국 지배계급의 소

제국주의적 확장 열망의 표현이었다.

한미동맹을 통해 권력과 부를 키워 온 한국 지배계급의 원조 정당답다. 베트남 파병으로 수십만 한국인 청년을 사지로 내몬 독재 정권의 후예답다.

극우파들은 미·중 갈등 심화로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한국 자본주의에 이익이 된다고 확신한다.

민주당도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에 충실하려 하기 때문에 참전에 찬성할 것이 확실하다.

국정원장을 지낸 원로 의원 박지원이 파병 요구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민주당의 진심을 드러낸 것이다.

9월 7일 민주당의 김민석 지도부는 김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파병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정부는 국익을 위해 장고 중’이라는 속임수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국회로 넘겨 트럼프의 요구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국회가 이를 부결시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미국에 면피도 하고 파병도 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완전한 공상이다.

파병 동의안이 상정되면, 민주당 안에서 파병 반대 의원들이 다수를 이룰 가망도 없지만 파병 반대를 표명한 극소수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질지도 불확실하다. 2005년 12월 파병 연장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겨레〉기사의 제목은 이랬다. “이라크 파병 반대” 핏대 올리던 의원들 어디로 갔나”였다.

파병을 막을 힘은 국회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 미국, 국힘, 정부, 민주당 모두에 반대해야 탄탄한 반전 운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

미국이 아닌
유럽과 함께하는
파병은 괜찮다?

극소수 민주당 의원들은 파병 반대처럼 들리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 보면 유럽을 통한 파병을 하자는 것이다. 유럽 주도의 호르무즈 자유항행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다.

첫째, 유럽도 제국주의 세력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 개입의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 제국주의 국가다. 이란 당국은 이들이 주도하는 기뢰 제거와 호르무즈해협 호위 선단도 “역외 세력의 군사적 개입”, “주권 침해”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둘째, 유럽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해 보장을 명분으로 세운다고 해도 그것이 이란의 핵심 항전 수단을 무력화해 미국의 전쟁을 돕는 일이라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은 오로지 미국의 전쟁 때문에 위험한 바다가 된 것이다.

부산·울산 공개토론회

이란 전쟁 파병 검토: 이재명은 왜 트럼프의 구원투수가 되고자 하는가?

일시 9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부산 하이튼 스타디움 4층 psm강의실 (서면역 2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영익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실패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공저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부산·울산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28-8029 / busan-ulsan@ws.or.k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86가길 5 3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38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 이란 전쟁과 한국의 참전 문제
- ▶ 인공지능(AI) - 희망, 거품 혹은 재앙?
- ▶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7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에서도 한 방 먹은 트럼프

이원웅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그다음 중요한 해협에서도 미국 제국주의가 크게 한 방 먹었다. 예멘 후티가 홍해로 들어가는 바브엘만데브해협의 요충지들을 파죽지세로 장악한 것이다.

지난 7월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의 사나 공항을 폭격한 이후,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이번 달 초부터 지상 공세를 시작해 9월 10일 핵심 항구인 모카를 장악하고, 다음 날 바브알만데브해협의 가장 좁은 목 한가운데에 있는 페림섬까지 장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빈살만은 트럼프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직접 개입을 거부하고 표적 정보만 제공했다. 이미 호르무즈해협에서 힘이 부치는 상황에서 당장 전쟁을 확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영국·이스라엘



제국주의로 가장 고통받던 예멘인들이 홍해를 봉쇄해 세계 경제를 뒤흔들다

과 함께 예멘에서 1,000여 곳을 폭격했음에도 후티를 제압하지 못해 그들과 협정을 체결해야 했다.

바브엘만데브해협의 봉쇄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이다. 그곳은 이집트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길목이고, 세계 무역의 12퍼센트가 지나가는 곳이다.

게다가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이래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 많

은 부분을 홍해의 항구들을 통해 수출해 왔다.

그 석유를 아라비아반도 반대편(홍해 쪽)으로 보내는 파이프라인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무장조직이 감행한 일이었다.

이러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의 공세는 중동 지역 강자들 사이의 각축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후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후티의 공세는 이란 전쟁의 일부일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돼 온 예멘 전쟁의 일부이기도 하다.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지만, 흔히 묘사되는 것과 달리 단지 이란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후티 운동(정식 명칭은 '안사르 알라')은 1990년대에 예멘 독재자 살레의 부패에 맞선 투쟁으로 시작됐다.

1978년부터 북예멘을 통치한 살레는 재통일된 예멘에서도 권좌를 지켰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내몰고,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조해 수많은 예멘인의 분노를 샀다. 후티 운동은 그런 분노가 결집하는 한 축이었고, 2000년대에 살레 정권과 무장 충돌을 벌였다.

그러나 살레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2011년의 대중 혁명이었다. 그런데 그 혁명이 더 전진하지 못하고 예멘의 통제권을 둘러싼 예

멘 지배 분파들의 내전으로 굴절되면서 후티가 부상한 것이다.

살레는 숙적이었던 후티와 힘을 합쳐, 서방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를 예멘 수도에서 몰아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서방의 무기를 지원받으며 후티를 상대로 무자비한 전쟁을 벌였다.

예멘인들은 그 과정에서 참혹한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결국 서방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살레 모두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후티는 살아남았다.

가자 전쟁 동안 후티는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예멘 안팎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후티의 공격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립서비스 외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아랍 정권들의 위선과 적나라하게 대조됐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 우방들이,

중동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패배하기를 바라야 한다. 이란과 후티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한 방 먹인 것에 마땅히 환호해야 한다.

물론 그것이 곧 이란 정권에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야 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후티도 중동에서 필요한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세력이 될 수는 없다. 예멘 내전에서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 축출된(그러나 여전히 군부를 통제하던) 독재자 살레와 다시 손잡은 것은 후티가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아니라 지배자들 간 권력 투쟁의 일부가 되려 했음을 보여 준다.

진정한 희망은 2011년 아랍 혁명 때처럼 아랍 세계의 노동자·빈민 대중이 다시 떨쳐 일어나는 데 있다. 그들이야말로 제국주의 질서 자체에 도전하고 해방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는 세력이다.

이재명 정부의 후티 규탄 '안전 항행'이라는 파병 명분 쌓기

후티가 홍해의 요충지를 장악하자 9월 14일 이재명 정부는 민간 시설 공격과 '안전 항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

유럽 정부들이 일제히 후티 규탄 입장을 발표한 것과 공명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신속한 반응은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보다 자신들의 핵심 항로가 막혀 이윤 추구에 차질을 빚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함을 보여 줬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 항행'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불과 두 달 전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의 공항을 폭격했을 때 이재명 정부는 이를 규탄한 적이 있는가.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예멘의 인프라와 민간 시설을 폭격했을 때도 이재명 정부는 침묵했다.

이제 와서 '안전 항행', 중동의 평화 운운하며 후티를 규탄하는 것은 호르무즈해협 파병의 명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물론 후티의 홍해 봉쇄가 낱을 경제적 파장은 한국의 보통 사람들의 삶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항행 보장'을 위한 파병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전(당분간 파병 반대) 운동은 그러한 고통을 낳는 전쟁의 책임이 미국 제국주의에 있고, 미국 제국주의가 예멘을 포함한 중동의 민중을 커다란 고통에 빠뜨려 왔으며, 파병은 거기에 일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재명은 왜 트럼프의 구원투수가 되고자 하는가?

효과적인 파병 반대 운동 건설을 위해

김인식

이 글은 9월 10일 노동자연대 서울지역 모임들이 주최한 토론회 ‘이란 전쟁 파병 검토: 이재명은 왜 트럼프의 구원투수가 되고자 하는가?’에서 발표한 것을 다듬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반년가량 줄타기를 하다가 이란 전쟁 참전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검토 중”, “결정된 바 없다”고 연막을 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에 현지조사단을 보냈다. 현지조사단의 임무는 기항지, 작전 기지 등 현지 작전 여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파병의 명분과 형식을 위한 작업이다. P-8A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EOD) 등 파병 후보의 전력도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파병 문제를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 이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뿐 아니라, 이재명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만나 호르무즈 공조를 선언했다. 프랑스는 다목적 호위함 1척, 기뢰탐색함 2척, 해상초계기 1대를 현재 역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에 파병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 프랑스·영국 군대는 호르무즈해협 내부로 본격 진입하거나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을 다국적 연합군에 파병하면 트럼프가 격분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군이 파병된다면 미국과의 연합 작전에 투입될 공산이 크다. 현재 거론되는 파병 전력은 독자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간 아랍에미리트는 미 공군의 주요 작전 거점이다. 한국의 “군사적 기여”가 트럼프를 이란 전쟁의 실패에서 구해 주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방어용’, ‘비전투용’ 같은 말은 별 의미가 없다

지는 못할 듯하지만, 미국의 이란 전쟁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란은 한국의 호르무즈 개입을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로 이란은 본보기로 한국군을 공격할 수 있다. 군함뿐 아니라 유조선과 상선, 걸프 지역의 한국 자산 등도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전쟁 활동은 직접·간접으로 반드시 전투와 관련돼 있다” (클라우제비츠)

이재명 정부는 파병 후보 전력을 비전투 자산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파병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려는 기만일 뿐이다. 원래 P-8A 초계기는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공격형 전투 자산이다. 설령 정보·감시·정찰 등의 임무만 수행해도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미군에 전달된다. 즉, 미군의 대규모 함대 작전의 일부인 것이다.

위대한 군사 사상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 비전투 활동이 전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쟁에서 수단은 오직 하나, 전투다”, “모든 전쟁 활동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반드시 전투와 관련돼 있다.”

고 리영희 교수도 30년 전에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군사력에서 ‘공격’용이나 ‘방위’용이냐의 연쟁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리고 다분히 자의적이고 혼

히는 속임수다. 방어용만으로 제조된 탱크나 대포는 없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분명하지 않겠는가.

노무현 정부도 2003년 이라크에 파병할 때 똑같은 논리를 폈다. 공병부대와 의무부대를 비전투 병력이라며 파병했다. 공병을 비전투 병력으로 지칭한 것은 희대의 사기였다. 게다가 이 ‘비전투’ 부대가 현지에서 적응하며 전투병 파병의 전초가 됐다. 이듬해 전투 부대인 자이툰 부대가 3,000명 규모로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됐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황이 악화되면 미국이 한국에 연안 전투함, 기뢰 제거 소해함, 이지스함의 파병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른바 비전투 자산 파견은 문간에 발 들여놓기 과정이다.

“굴욕 외교”?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한국 자본주의의 이해관계 추구하기

이재명 정부가 파병으로 선회하는 듯하자 트럼프의 협박과 강요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굴욕 외교”라는 것이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계속 파병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는 8월 중순 이후 5차례나 이재명 정부에 파병을 압박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시켰다.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동맹만으로는 대(對)이란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나토의 유럽 회원국과 일본 등에도 파병을 계속 요청해 왔다.

트럼프는 지금 한국을 동맹국 전체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을 꼭 집어 파병을 압박함으로써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재정적 기여를 늘리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헌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렛대

트럼프는 한미 협상 사안, 남북·북미 관계를 파병 압박 카드로 활용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추가 관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등 만만찮은 쟁점들이 있다.

이는 재벌이나 방산업체 등 특정 자본 부문뿐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전체의 이익이 걸려 있는 쟁점들이



사진출처: 청와대

“글로벌 책임 강국” 지향은 야만적인 제국주의 질서의 하위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것

다. 한미 간 쟁점으로 돼 있는 기술, 통상, 군사 분야는 한국 자본주의가 소제국주의로 도약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는 북미 대화 추진 카드를 이용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며 이재명 정부에 이란 전쟁 지원을 압박했다.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전격 축소시키자,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실질적 기여”를 하며 시간을 끌다가는 한미 관계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고 실감하게 된 듯하다.

트럼프는 때마침 악화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위기도 파고들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극우 손현보를 만나 힘을 실어 줬다.

그래서 이재명은 파병을 통해, 난항에 봉착한 한미 관계를 풀고자 하는 듯하다. 기업주 언론 <중앙일보>도 파병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굴곡

굽직한 안보·통상 현안이 얹히고설킨 상황에서 무엇 하나 결론내지 않고선 한·미 관계가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현대차, 삼성, SK, LG 등 대기업들이 절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도 호르무즈해협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을 지적하며 파병에 찬성했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는 단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참전하려는 것이다. 파병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이 걸려 있는 한미 간 현안을 전폭적으로 풀어줄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단지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해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반쪽 진실이다. 반쪽 진실은 참이 아니다. 고립된 명제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전체 그림이 중요한데, 반쪽 진실은 참인 조각들로 거짓 그림을 만들기 때문이다.

협소한 투쟁 표적 설정의 문제점

이란 전쟁 파병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보통 반전 운동의 표적을 압도적으로 미국과 국내의 친미주의자들에만 맞춘다. 일부 좌파는 이재명을 정조준하지 않고 단지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한다. 이 자들이 “국익보다 워싱턴의 지시를 먼저 떠받드는” “동맹지상주의자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위성력 같은 자들은 마땅히 경질돼야 한다. 그러나 외교안보 관료들만 문제인가? 이 자들이 대통령 이재명 몰래 파병을 검토했을까?

위성력은 이재명의 ‘실용’ 외교를 설계·집행하는 핵심 인물이다.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삼아 한국 자본주의의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이재명식 ‘실용’ 외교의 요체다. 이재명 자신이 대미 투자 협상을 주도하며 한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해 왔다.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제국주의의 상태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헤게모니가 위기를 겪으면서 미·중 간 갈등이 일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났다. 중동에서도 소제국주의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제국주의 체제 내 적대와 무력 충돌이 확산되는 국면인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이 과거의 유물이라는 주장이 유행했었다. 하지만 틀렸다. 우리

는 레닌이 제국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제1차세계대전 개전 직전과 유사한 상황에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책임 강국”(소제국주의) 지향은 이러한 제국주의 질서의 진동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제국주의의 위기에 더한층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좌파는 그 대신에 “외교적 노력”을 요구한다. 그것은 소박한 평화주의적 요구이지만, 오늘날 제국주의 체제의 국면 변화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구다.

오늘날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점점 외교·협상보다 군사적 위협과 공세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고 믿는다. 트럼프만 ‘함포 외교’를 하는 게 아니다. 중국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주변국과 대만을 겨냥해 함포 외교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4년 넘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 정부들 또한 타협적 평화를 반대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 니콜라이 부하린은 국가 간 갈등과 투쟁이 발전하게 되면, (사회 지배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 전쟁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했다.

실로 오늘날 제국주의는 포식성 제국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군비 증강, 무기 수출, 파병 등으로 이런 변화에 위험한 일조를 하고 있다.

국익 프레임의 약점

포식성 제국주의로의 변화 때문에 좌파에서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파병은 국익이 아니라는 주장도 그것의 약한 표현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국제주의는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본다. 하지만 좌파적 민족주의는 분석 단위를 ‘국가 대 국가’ 또는 ‘지배국 대 예속국’

으로 설정한다.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을 ‘국민’ 또는 ‘국가’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좌파가 국익의 이름으로 파병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다.

모든 전쟁은 국익의 이름으로 벌어

▶ 6면으로 이어짐

▶ 5면에서 이어짐

진다. 이재명 정부의 이란 전쟁 파병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미 투자·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핵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자본가의 사활적인 이익이 달려 있는 안정적인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에너지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 안전한 항행에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한국의 핵심 이익 수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파도

국익의 이름으로 파병을 찬성한다.

이때 국익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국이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 다른 국가와 싸우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국익론은 파병 반대가 일부 보수층에게도 소구력을 가지기를 바라는 포퓰리즘이다. 그러나 착취하는 자들과 착취당하는 자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국익은 없다. 이렇게 국익론으로 접근하면 전쟁·파병 반대와 노동계급의 요구는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현재 국회는 전쟁·파병 반대의 진지가 될 수 있는가

진보당의 바람대로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거부할 것인가? 파병은 위헌이라는 식의 자유주의적 프레임은 효과적 무기가 아니다.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이 파병을 반대할 것이라는 (불확실한) 희망을 깔고 있는 것이다. 국힘이 당론으로 파병을 반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아마도 이란과의 직접 교전은 피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렇지만 호르무즈해협의

경제·안보적 중요성과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그들은 무시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지난 3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이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 민주당 의원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나마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후 청해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찬성했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이란 전쟁 파병을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일관된 반전·반제국주의 정당이 아닌 것이다.

역대 민주당 정부가 예외 없이 미국



‘국익’은 지배계급과 자본주의 국가의 이익을 뜻한다

의 파병 요청에 응했음을 기억한다면, 민주당이 이란 전쟁 파병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가늠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를 우회해 전투함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당시 민주

당에서 파병 반대 입장을 유지했던 의원은 임종인 의원 한 명이었다. 민주당은 2008년 총선에서 임종인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임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민중전선 전략은 노동계급에 기억상실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계급의 기억이 돼야 한다.

반전 운동(파병 반대 운동)은 정부의 대미 협상력 지렛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한겨레〉는 노무현 정부가 반전 운동을 대미 협상에 활용한 경험을 참고하라는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의 말을 실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인 5,000명 규모 전투병을 3,000명으로 줄여 교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이라크 북부 아르빌로 파병한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참전한 사실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파병 반대가 “정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 정부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이재명 정권이 잘되길 바라는 모든 세력은 파병 반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을 압박하면 그에게 파병을 거부할 명분을 줄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을 버는 사이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물밑 협상을 하면 파병을 하지 않

을 수도 있다는 (헛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전 운동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지렛대’ 역할을 자처하면 안 된다.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파병을 선언할 때 운동 진영이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무장해제

노무현 정부의 파병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반전 운동에 참여한 반미자주파와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 자체를 운동의 표적으로 삼지 않으려 했다. 노무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파병을 선택한 것이라는 측면은 무시됐고, 미국의 강요라는 측면만이 강조됐다.

그에 따라 반미자주파와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기보

다, 미국의 파병 압박을 물리치도록 노무현 정부를 돕는다는 접근법으로 반전 운동을 이끌려 했다. 그래서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과의 공조를 중시하며 국회에서 파병 결정을 무산시키는 데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주당은 파병을 거부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 파병을 강행하자, 파병 반대 운동은 급속히 사그라들었다.

사실, 애초에 반미자주파는 이라크 전쟁/파병 반대 운동보다 한반도 평화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파병 반대 운동을 통해 노무현이 미국의 파병 압력에 반대할 명분을 주고자 했다. 그래서 노무현이 파병을 하자 운동이 확대되고 단단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사그라들었다.

좌파 민족주의와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지배계급의 일부와 동맹한다는

전략이 낳은 문제였다.

그럼에도 이라크 전쟁 반대 때는 반전 정서뿐 아니라 운동도 상당 수준과 규모로 일어났다. 국제 반전 운동의 분출, 직전에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에 항의하는 40만 명 규모의 시위와 그 덕택에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한국의 역동적 정치 상황 속에서 한국 최초의 대중적 반전 운동이 등장했다. ‘노동자연대’의 전신 ‘다함께’는 이 운동에 선구적으로 뛰어들어 기여했다. 고 서동만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라크 파병 결정이 노무현 정부를 임기 초반부터 위기에 빠뜨렸다고 회고했다.

이재명도 이란 전쟁 파병을 결정하면 지지 기반이 심각하게 물러갈 것이다. 9월 9일 열린 통일부 주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회의에서 이해정 중앙대 교수는 파병하면 이재명 정부가 “식물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의 기만과 배신에 수많은 지지



파병은 이재명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 수 있다. 좌파는 정치적으로 독립해 대중 동원을 조직해야 한다

파병이 결정돼도 철군을 요구하는 반전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 이라크 전쟁 때보다 지금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는 훨씬 더 첨예하다. 미국 제국주의 헤게모니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란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대 전략적 실수다.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보다 더 큰 실수다.

트럼프는 미국 힘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쉽게 물러설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

부시 행정부가 시작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뜻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금세 끝나지 않았다. 16년이나 지속되며 보복의 악순환을 거듭했다. 상처 입은 야수가 더 위험한 것처럼, 트럼프가 버티며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란 전쟁은 이미 서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두 개의 주요 전쟁이 연결될 위험성마저 있다. 한국은 이 두 전쟁에 휘말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국면에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대중의 반대를 거슬러 파병을 결정해도 반제국주의자들은 파병 한국군 철군을 요구하며 굳건하게 반전 운동을 구축해야 나가야 한다.

자가 실망할 것이다. 그중 일부는 분노하고 행동할 것이다. 또 다른 일부는 사기 저하를 겪을 것이다. 아마 적잖은 사람들은 가뜰이나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파병 반대로 흔들면 극우만 득을 볼 것이라는 생각에 심경이 착잡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좌파는 이재명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해 대중 동원을 조직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우익이 이런 상황에서 득을 볼 위험이 실질적이 될 수 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지자들의 실망과 환멸을 사고 있는 반면, 극우는 자신들이 민주주의 수호자이자 자유의 전사인 양 기세등등하게 귀환하고 있다. 계엄을 옹호하고 군사 독재를 미화하는 말과 행동이 국회·광장·인터넷에 넘쳐난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강조하겠다.

첫째,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반대할 뿐 아니라, 미국이 이란에 의해 패배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란 정권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진영론을 거부한다. 진영론은 이란·중국·러시아 등 미국의 적성국·경쟁국을 편드는 것이 진보적이라는 이데올로기다. 계급 대 계급이 아닌 국가 대 국가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환영하는 것은 그것이 세계의 착취받고 천대받는 대중의 투쟁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국주의에 의해 압박받는 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계속 건설해 가는 한편, 반전 운동/파병 반대 운동과 연결시켜야 한다.

계급 대 계급

둘째, 한국 정부의 이란 전쟁 파병은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자 전쟁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지배계급에 맞서야 한다. 해외에서 미국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 지배자들에 맞서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파병을 정당화하

고 군비를 늘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군국주의, 국익(민족)주의 등을 강화하는 것에 맞서야 한다.

셋째, 이재명 정부가 그 방향으로 나갈수록 극우가 더한층 고무될 것이다. 극우는 이재명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민주적 권리와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공격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극우의 준동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파병을 실제로 막을 힘은 노동계급의 독립적 행동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반전 운동과 노동계급의 요구를 연결해야 한다. 트럼프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데 돈을 쓰지 말고 복지를 확충하고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국군 파병은 팔레스타인 억압에 가담하는 짓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지지자들은 한국군 파병에도 반대해야 한다

최일봉 노동자연대 국제연락간사

파병은 곧 참전이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방부 실사단은 이미 중동 출장을 다녀왔고, 청와대는 ‘비전투 수색·구조 부대’ 같은 선택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말은 조심스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채, 파병의 명분과 형식을 찾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눈속임이 시작된다. ‘비전투’라는 수식어다. 그러나 전쟁 중인 해역에 군함을 보내 미군 주도의 작전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 부대가 총을 먼저 쏘든 쏘지 않은 참전이다. 이란 정부는 작전의 성격과 무관하게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외국군의 군사적 개입을 침략 가담으로 간주하겠다고 이미 못 박았다. 전쟁의 한쪽 당사자가 적대 행위로 규정하는 행동을 우리가 ‘비전투’라고 부른다고 해서 비전투가 되지는 않는다. 2020년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슬그머니 호르무즈까지 넓힌 전례가 보여주듯, 파병의 문을 일단 열면 그 성격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다.

게다가 이 파병은 단순한 해상 경비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통제는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 계획에서 핵심 고리다. 해협을 ‘열어 둔다’는 것은 곧 이란이 가진 거의 유일한 대응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란에 대한 봉쇄와 압박을 완성하는 행위다. 한국군은 그 봉쇄망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과 이스라엘

“우리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돕는 게 아니다.” 이 항변은 두 번째 쟁점으로, 흔히 건너뛰기 쉬운 고리다. 그러나 이란을 상대로 한 이 전쟁은 처음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전쟁이다. 이란의 핵 시설과 군 지휘부를 타격한 것은 이스라엘



한국군 파병 반대! 이란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란, 한국의 보통 사람들을 위해

이었고, 미국은 그 뒤를 받치다 직접 앞장섰다. 두 국가의 전쟁 목표는 동일하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이란을 ‘존재론적 위협’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이란이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과 레바논, 예멘의 후티 세력을 지원하며 이스라엘의 행동 반경을 제약해 왔기 때문이다. 이란이 무력화되면 그 제약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을 끌어들이어 이란을 치려 했고, 미국은 동맹국들을 끌어들이어 그 부담을 분담하려 한다. 한국군 파병은 그 사슬의 맨 끝에 놓인다. 한국이 이란을 봉쇄하는 데 손을 보태면, 그 이득은 곧바로 이스라엘에 돌아간다. 트럼프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곧 네타냐후에게 제 공하는 지원인 이유다.

이란 억압과 팔레스타인의 참상

세 번째 쟁점은 이런 질문이다. “이란 정권은 억압적이다. 이란을 옹호하는 것이 왜 팔레스타인 연대인가?” 이 질문은 그럴듯하지만 과녁이 잘못됐다. 파병 반대는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란 노동자와 여성,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정권을 옹호할 이유는 없다. 파병 반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 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명백하다. 이스라엘은 지

금 이 순간에도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굶기고, 폭격하고, 몰아내고 있다. 국제 기구의 어떤 압력도 이스라엘을 멈추지 못했다. 그나마 이스라엘이 계산해야 했던 유일한 변수는 지역 내 군사적 대항 세력과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운동이었다. 이란 전쟁은 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란이 꺾이면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서안지구에서, 레바논에서 더 마음껏 행동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란 전쟁의 승리는 곧 다음 학살의 예고다.

따라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명분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 억압의 측면 지원이다. 가자의 아이들을 위해 거리에 나섰던 사람들이 이 파병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앞문에서 학살을 규탄하면서 뒷문으로 학살자에게 배를 보내 주는 것과 같다.

파병은 한국 대중의 이익과 무관하다

팔레스타인 연대의 논리에 더해, 파병은 한국의 억압받는 대중 자신에게도 재앙이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수송로 보호’를 말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위험하게 만든 것은 이란이 아니라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다. 전쟁을 확대하는 데 가담하면서 수송로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부으며 불이 꺼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란은 파병 시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

타르 등 걸프 지역의 한국 자산과 노동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곳에는 수만 명의 한국인이 일하고 있다. 파병은 그들을 인질로 내주는 일이다.

파병은 또한 한국군 군복을 입은 노동계급 청년을 무관한 전장에 내보내는 일이다. 이 전쟁에서 한국 대중이 얻을 것은 없다.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얻는 것은 동맹국들의 참전이 주는 정당성이고, 이스라엘 아류 제국주의자들이 얻는 것은 자유로운 손이다. 한국인이 얻는 것은 중동에서 ‘미국의 용병’이라는 낙인과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을 원한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과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지난 3년 동안 가자 학살과 서안지구 폭력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 그 운동의 힘은 도덕적 분노에서 나왔지만, 그 분노를 실제 결과로 바꾸려면 학살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겨냥해야 한다. 그 장치는 이스라엘 정부 하나가 아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는 미국, 미국의 전쟁을 뒷받침하는 동맹국들, 그리고 그 동맹의 요청에 군함을 보내려는 우리나라 정부다.

호르무즈 파병 반대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외연 확장’이 아니라 그 운동의 본령이다. 학살에 반대한다면 학살자를 강화하는 전쟁에 반대해야 하고, 그 전쟁에 우리 정부가 가담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고, 부대 지정에 몇 주가 걸린다. 그 시간은 우리가 파병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다.

한국군은 이란과 오만의 바다에 가서는 안 된다. 이란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자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란의 보통 사람들, 걸프의 한국 노동자들과 군복 입은 우리 노동계급 청년들을 위해서다. 미국의 전쟁에 우리의 이름을 빌려주지 말자. 그리고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지지자들과 함께 외치자. “Not in Our Name!”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진 출처: Jaber Jaber/Badwan

이란 약화와 팔레스타인의 자유

최일봉 노동자연대 국제연락간사

이란 정권을 옹호하지 않고도 이란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팔레스타인인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 그러나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주장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약한 듯한 대목이 있다. 바로 ‘이란이 약해지면 팔레스타인 억압이 더 심해진다’는 주장이다.

파병 찬성론자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안에서도 이런 반론이 나온다. “이란 정권은 팔레스타인을 이용해 왔을 뿐이다. 이란의 대리 세

력 지원은 팔레스타인인에게 해방이 아니라 더 긴 고통을 안겨줬다. 그런 이란이 꺾인다고 팔레스타인이 더 나빠질 이유가 무엇인가?”

이 반론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는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은 틀렸다. 이란 정권을 아무리 냉정하게 비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는 없다. 이 반론에서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따져 봐야 한다.

반론들

반론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다.

첫째, 이란 정권에게 팔레스타인 해방은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다. 국내에서는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고 하잡 착용 강요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선 여성을 죽인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저항의 축’을 자처한다. 팔레스타인인의 비극을 이용해 자기 정권이 정당하다고 내세우는 것이다.

둘째, 이란의 무장 세력 지원은 팔레스타인의 투쟁을 이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에 휘둘리게 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 학살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포장할 수 있었다. 미국 등 서방 정부도 그 설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란과 연결돼 있다는 점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인식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셋째, 이란은 정작 가자가 불타 버려져 있지 않았다. ‘저항의 축’은 헤즈볼라를 소모품처럼 썼다. 시리아에서는 그 군사력을 민중 봉기를 짓밟는 데 썼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인이 이란 덕분에 얻은 것은 무엇인가?

넷째, 아랍 정권들은 ‘이란의 위협’을 핑계로 이스라엘과 손잡았다. 이란이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아랍 정권들이 이스라엘 편에 설 명분도 사라진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사실이다. 이란 정권이 냉소적이고 위선적이며, 팔레스타인인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따져야 할 핵심 문제는 따로 있다.

첫째 오류

서로 다른 두 주장을 뒤섞는다

첫째 반론은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좋은 동맹이다’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로 파병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팔레스타인인의 처지는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이 두 주장은 서로 다르다.

이란이 팔레스타인의 친구가 아니라는 말과, 이란을 굴복시키는 전쟁이 팔레스타인의 적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은 동시에 옳을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

앞의 반론은 이란 정권이 얼마나 나

쁜 정권인지를 근거로 전쟁의 결과를 내다보려 한다. 그러나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그 정권이 얼마나 도덕적인지가 아니라, 전쟁으로 어느 쪽이 강해지고 어느 쪽이 약해지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강해지는가? 이란 민중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인도 아니다. 강해지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다. 이란 정권이 위선적이라는 지적만으로는 이 단순한 사실을 반박할 수 없다.

둘째 오류

억압의 원인을 저항에서 찾는다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이 팔레스타인인의 고통을 연장했다’는 주장에는 드러나지 않은 가정이 깔려 있다. 무장 저항이 없었다면, 또는 이란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억압이 줄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이 가정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오슬로 협정 이후인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팔레스타인 당국, 이른바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 ‘안보 협력’을 하며 무장 저항을 억눌렀다. 그런데 그 시기에 서안지구의 식민 정착자는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이스라엘은 2008년, 2012년, 2014년에 가자를 폭격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말살하려 하며 그 땅에서 밀어내는 이유는 이란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팔레스

타인인이 그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온주의 정착민 식민주의는 팔레스타인인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팔레스타인인이 저항하든 하지 않든 계속된다. 저항이 없으면 더 조용히 진행될 뿐이다.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포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명분에만 주목하다가 실제로 벌어지는 억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명분을 찾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그보다 전에는 ‘안전 보장’을 내세웠다. 억압자가 내세우는 이유를 없애면 억압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억압자의 말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다.

▶ 10면으로 이어짐



2011년 이집트 혁명에서 나부킨 팔레스타인 깃발.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동맹은 이란 정권이 아니라, 중동의 보통 사람들이다

사진 출처: 기가 에프라렐

▶ 9면에서 이어짐

셋째 오류

이미 드러난 결과를 놓친다

이 논쟁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는 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란의 지역 영향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로 지켜봤다.

2024년 가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지도부를 제거하고 레바논 남부를 초토화했다. 그해 겨울에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공백 속에서 이란과 헤즈볼라를 잇는 보급선이 끊겼다.

앞의 반론이 맞다면,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인의 처지는 나아졌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토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서안지구에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려는 병합 조치들이 더 빠르게 추진됐다. 가자에서는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것이 전쟁 무기로 쓰였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중동을 다시 그런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이스라엘을 견제하던 힘이 약해지자 이스라엘은 더 거침없이 행동했다. 팔레스타인인을 더 마음대로 억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살펴본 결과다. 이란이 완전히 패배하면 팔레스타인인의 처지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지난 2년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다.

넷째 오류

‘이란의 위협’이 사라지면 아랍 정권이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랍 정권들이 이란을 이유로 이스라엘과 손잡았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이란의 위협은 핑계일 뿐이다. 그 핑계가 사라진다고 해서 아랍 정권들이 팔레스타인 편에 설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

걸프 지역 왕정들이 이스라엘과 손잡은 진짜 이유는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 왕정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에 의존한다. 미국은 그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한다. 이란이 사라진

다고 해서 미국의 요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 아랍 정권들이 미국의 요구에 맞설 명분이 하나 더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란이 패배하면 이 지역에서는 미국·이스라엘·걸프 왕정의 삼각 동맹이 더욱 굳어질 것이다. 그 동맹이 지배하는 질서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설 자리는 없다. 이미 그 밑그림에는 가자를 부동산 개발 부지로 보는 생각과 팔레스타인인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구상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이란 정권을 옹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바로 이 점이 이 논쟁의 핵심이다. 앞의 반론은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란 옹호자’로 몰아가려 한다.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란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파병 반대론자들을 모두 ‘이란 옹호자’로 규정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란 정권은 이란 민중의 적이다. 팔레스타인의 친구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과 전쟁으로 이란 정권을 굴복시키거나 무너뜨린다면, 그 결과는 이란의 민주화가 아니다. 이라크에서 벌어진 것 같은 파국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지지한 사람들도 “사담 후세인은 독재자”라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근거로 “침공은 이라크인에게 좋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잘못이었다. 지금의 반론도 같은 잘못

을 되풀이한다. ‘이란 정권은 팔레스타인을 이용한다’는 사실에서 ‘이란을 꺾는 전쟁은 팔레스타인에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동맹은 이란 정권이 아니다. 2011년 광장에 나왔던 이집트 청년과 노동자 대중, 2019년 거리를 메웠던 이라크와 레바논의 청년, 하잡 착용 자유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이란 여성들이 진정한 동맹이다.

이란 정권은 이 사람들이 벌인 저항을 모두 두려워하고 탄압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했다. 이 지역의 억압적 정권들과 제국주의 열강은 대중이 저항할 때 한편에 선다.

따라서 이란 정권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억압적인 정권과 제국주의 열강 양쪽 모두에 반대하는 유일하게 일관된 입장이다.

결론

‘이란이 약해지면 팔레스타인 억압이 더 심해진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다. 그러나 논쟁이 있다는 것과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이 주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란 정권의 위선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위선적이라는 사실이 전쟁의 효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이스라엘을 견제하던 힘이 약해졌을 때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는 지난 2년 동안 이미 드러났다. 레바

논과 시리아에서 실제로 확인된 이 결과는 이란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든 달라지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이란 정권을 두둔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란 정권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그 정권을 폭격하는 제국주의 전쟁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인을 돕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돕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에 반대해야 한다는 결론도 달라지지 않는다.

가자 인종학살 3년 팔레스타인 연대 포럼

일시 9월 19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B2 다목적홀

15:00~16:50

시온주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도니 글릭스틴 유대계 영국인 역사학자, 반전 반파시즘 활동가

17:10~19:40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와 행동

람시스 킬라니 팔레스타인계 독일인 활동가 요르고스 고고스 그리스 피레우스항만공사 힘찬노동자노조 위원장

기와 단다시 제한 레바논인, 경성대학교 교수 조수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 공동운영진

참가비: 20,000원 [대학생·난민: 13,000원] 한국어·영어·아랍어 통역 제공
문의: 010-2846-1948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세력균형이 극우로 기울고 있다

리얼미터가 9월 14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두 달 반 만에 국민 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30퍼센트대로 고착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재명과 여권의 정치 위기에서 국힘과 극우의 재부상 문제로 옮겨갈 듯하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독일 극우 AfD의 주의회 선거 승리, 프랑스 국민연합과 영국개혁당의 약진 등이 두드러진다. 프랑스 국민연합과 독일 AfD의 핵심부에 파시스트가 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탈리아의 최장기 집권 정부가 됐다.

심화되는 다중 위기와 중도 정치 세력들의 실패와 몰락이 배경이다. 특히 중도좌파 정당들의 집권 후 배신, 특히 경제 위기 고통 전가와 인종차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노선이 극우 부상에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지지층의 염원인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에서 급속히 멀어지고, 그와 완전히 배치되는 친기업·친제국주의 노선을 통한 중도보수 지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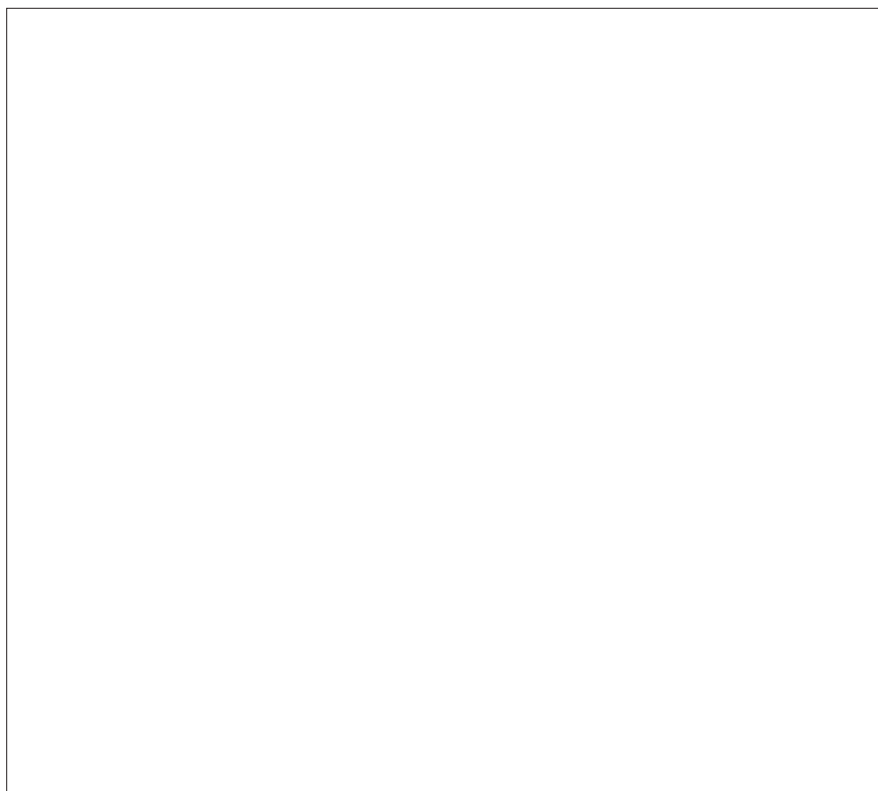
이재명이 우파의 의제를 수용할수록 국힘 등 우파는 사기와 자신감이 오르고 개혁 염원층은 실망과 환멸로 돌아선다. 우파는 이를 익숙하게 우파 결집 계기로 삼고 있다.

가령 친미반중 강령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지지했던 윤어게인 극우에게 이재명의 이란 전쟁 참전 움직임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극우는 자신들의 의제가 실현돼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파병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이재명이 다 지기 때문이다.

세 층위 극우의 상호 연결

지금 극우의 도전은 서로 연결된 세 세력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첫째, 한국 극우를 지원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 세력이다. 트럼프는 이재명 정부에 미국 제국주의 협력 노선을 압박할 뿐 아니라 쿠짱과 정보 통신법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한국 극우 세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8월 트럼프는 윤어게인 극우 목사인 손현보를 백악관에서 접견했다.



극우는 이재명 위기의 본질인 대중의 환멸을 이용하려고 더한층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둘째, 공식 정치의 극우파 정치인들이다. 장동혁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색깔론 공격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도하는 서울 올림픽공원 농성 100일 동안 80번이나 방문해 시위자들을 격려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힘 안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서 반사이익을 얻기 더 쉽게) 좀 더 중도 포용적 인물을 내세우자는 의견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국힘의 재부상이 극우화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극우의 주류화 추세가 역전되긴 어려울 것이다.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간 이진숙은 5·18 역사 부정에 앞장서고 있다. 8월에만 해도 학술 토론회를 가장해 가당치도 않게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운운했다. 이진숙은 9월 10일에는 아예 국회 안에서 집회를 열고 5·18 역사 부정을 노골화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1980년 진압 당시 전두환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등장한 정부는 모두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광주 학살 책임자인 노태우 정부조차 인정한 일을 뒤엎겠다는 것이다. ‘윤어게인’이 ‘전어게인’과 연결되는 것은 극우가 좌파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정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극단성의 표현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대

법관 임명을 놓고 도발하며 우파 결집의 또 다른 계기를 만들려 한다. 반 년 넘게 미루던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재명의 위기 시점에 행사한 것이다.

9월 10일에는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가 군사기밀누설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문상호가 비상계엄 전날 노상원에게 계획의 일부를 전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개된 정보를 북한 사람에게 전한 것만으로 간첩죄를 적용해 장기 징역형을 내리던 법원이 쿠데타 핵심 인물들에게는 더없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은 극우 성장의 자양분

셋째, 개신교 극우와 기층 운동 극우가 주축인 극우 세력이다. 이들은 올림픽공원을 100일 넘게 무단 점거하고서 대한체육회 등의 업무를 대놓고 방해하고 농성장 일대에서 민간인들에게 불법무도한 검문검색과 협박을 시도했는데도 강제 해산을 당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장동혁 등 상층 공식정치 극우가 이들을 지원하고, 기층 극우의 사악한 에너지는 다시 상층에서 극우 의제를 추진하는 데 활용된다. 개신교 극우 일부는 트럼프가 미국 중간선거 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공 농성 주도자들은 극우 운동의 간부로 성장하고 있다. 극우 사이에서 “올다르크”로 추앙받는 오자연은 올공 농성 주축 세력의 하나인 황교안의 정당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 오자연은 김건희에 대한 충성을 공개 표현하기도 했다.

기층 극우 세력은 8월 15일 수만 명이 결집한 전국 동원 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 좌파 척결 등을 결의했다. 이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단순한 선관위 불신이 아니다. 중도파와 좌파가 앞서는 선거는 앞으로도 일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 확장 열망을 받아 안아 트럼프의 포식성 제국주의를 지원하며 이란 전쟁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극우가 요구한 용혜인 낙마를 수용했다. 중대본부수사청장에는 윤석열·한동훈과 한솔밥을 먹었던 자를 임명했다.

그렇다고 범민주당계 내부의 이재명 비판이 설득력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오로지 부차적이기 이를 데 없는 검찰 개혁 문제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경찰 부패로 ‘검찰 개혁’이 노동자 등 보통 사람들에게 진정한 개혁이 아님이 간파된 것도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인데 말이다.

이런 상황이니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지지층을 달래려고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제 개혁을 진심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마당에 그 말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극우는 이재명 위기의 본질인 대중의 환멸을 이용하려고 더한층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극우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좌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기성 시스템을 흔들 힘을 가진 노동자들의 투쟁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다수 국회에 의존하는 전략에서는 노동자 투쟁을 적정선에서 제약해야 하므로 극우와 기업주, 제국주의를 타격할 힘을 극대화할 수 없다.

김문성

파병 반대

지배계급을 설득할 수 있다는 발상에 대해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이재혁

현재 파병 반대 운동들 가운데 반미 자주파와 주류 엔지오가 시작한 운동은 무게중심이 대정부 호소와 민주당 설득에 있다. 정부를 향해 ‘국민을 믿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파병은 ‘진정한 국익’이 아니라며 설득을 시도한다.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구를 직접 거부하기 어려우니, 여당이 국회에서 파병 반대 결의안 채택이나 정부 파병안 부결 등을 통해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흔하다.

9월 11일 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민주당과 함께 민중전선 정당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파병 반대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위험한 선택을 막고,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란 전쟁 파병 문제에서 민주당 정부를 설득·견인한다는 전술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

파병, 한국 지배계급의
중대한 이익이 걸린 사안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 참전을 지렛대 삼아 원유 수송로 안정, 한미 통상 협상, 핵잠수함 도입 등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들을 해결하려 한다.

특히, 지배계급은 한국을 소제국주의 강국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 대미



정부와 민주당을 견인하려다 오히려 그들에게 견인당하게 된다

협상력뿐 아니라 국제적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키우려는 생각이 있다.

이렇듯 중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 정부와 여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상이다.

지금도 자본가들과 우파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친기업 언론들은 국익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보기 외교”, “늑장 대응” 운운하며 파병 결정을 독촉한다.

민주당은 벌써 네 차례 집권한 정당이다. 그동안 자본가, 군부, 비선출 국가 관료와 민주당 사이에 거의 국힘 못지않은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이재명 정부도 한국의 자본 축적과 국가 위상 제고를 국정 수행의 중심에 놓고 있다. 왼쪽을 달래는 일도 하지만(지배계급 입장에서는 그것이 민주당 정부의 핵심적 유용성이다), 지배계급 전체의 이익을 지키고 관료와

군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그러기 위해 우파와 타협을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을 노동부 장관에 앉혀 놓고 노란봉투법을 후퇴시키는 것이나, 군부 출신이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을 국방장관에 임명한 것이 이런 모순의 사례다.

역대 모든 민주당 정부는 지지층의 여론과 좌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익”을 이유로 파병을 강행했다. 그 경험들에서 얻은 노하우가 현재 이란 전쟁 파병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고 있을 것이다.

가령 이라크 전쟁 파병으로 위기에 빠진 노무현 정부가 파병 직후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이용해 반미자주파를 포섭했듯(실제로는 보안법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도 좌파들의 반발을 무마할 기만책을 무기고에서 꺼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가령 개헌 카드).

지난 9월 4일 이재명이 진보 단체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도 기만책이었다. 당시 이재명은 진보 단체 지도자들에게 파병에 관해 “진척된 게 없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 국방부 파병 실사단이 중동으로 날아갔다.

그런 이재명 정부를 설득·견인하려는 전술은 성공하지 못한다. 좌파가 정부에 끌려다니게 되고, 파병 반대 대중에게 헛된 기대와 혼란을 안겨 줄 뿐이다.

정부를 겁먹게 해야 한다

현재 주요 좌파들은 파병 반대 운동에 충분히 동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파병반대 평화행동 시민대행진에 주최 측 추산으로도 겨우 1,000명이 참가했다. 진보당의 조직력만 생각하더라도 턱없이 작은 규모다. 규모뿐 아니라 메시지도 정부를 향한 응원과 촉구엔 머물렀다.

그 정도로는 정부·여당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파병 반대 운동의 무게중심을 대정부 호소와 국회 대응에 놓게 되면 자기 제한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파병을 저지할 유일한 동력인 대중투쟁을 크게 건설하기는커녕 그 반대의 역학이 생겨난다.

게다가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응원을 보내는 파병 반대 운동은 파병이 결정될 경우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정부가 배신했을 때 사람들은 상실감과 환멸을 느끼고 사기가 급락할 것이다.

지배계급을 설득하려는 책략의 문제점

파병 문제에서 드러나는 주요 좌파들의 약점은 더 일반적인 정치 책략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자본가와 정부를 설득하려는 책략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

물론 트로츠키는 자본가와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일부 개혁과 양보를 얻을 수 있고 흔히 그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해 지배자들의 중대한 계급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도 압력과 설득으로 정책을 바꾸게 하려는 책략에는 그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부르주아지의 운명 전체가 걸린 문제에서는 ‘압력’으로 그들이 정책을 바꾸게 할 수 없다.”

민중전선 전략을 비판하면서 트로츠

키는 좌파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공상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좌파가 자유주의자들에게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트로츠키는 지배계급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지배계급은 방대한 세계적 경험, 세련된 계급 본능, 다양한 정보 수집 기관을 갖고 있다.”

지배계급은 수세기 동안 국가를 운영하고, 의회를 이용하고, 무력으로 대중 저항을 탄압하고,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포섭해 대중의 불만을 달래고, 온갖 수단으로 대중을 기만하는 등 지배와 통치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좌파가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기업주 등 지배자들이 정부에 영향력

▶ 13면으로 이어짐

김민석의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 파병 반대 운동 견제하기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한국갤럽 38퍼센트, 리얼미터 33.8퍼센트),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특히 진보층과 청년층의 이탈이 뚜렷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9월 14일 노무현 국회 탄핵 상황을 상기시켰다. “[현 상황]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취임 1년 3개월 된 정부의 여당 대표가 자기 대통령의 일축즉발 위기를 입에 올린 것은 실로 이례적이다.

김민석의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중수청장 후보 지명에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공개 반발한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추미애는 노무현 국회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 중 하나다.

그러나 “탄핵 전조” 경고는 좌파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진보층의 이반이 커지는 상황에서, 극우의 반동 위협을 상기시키며 좌파와 실망한 개혁 염원층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이재명이 9월 12일 SNS에 쓴 글도 같은 의도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

노무현 탄핵 사태

노무현은 2002년 말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항의하는 40만 명 규모의 대중(압도적으로 청년들) 시위 속에서 당선됐다.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는 “반미면 어쩌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취임 한 달 만에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부시를 만나는 주한미군에 경의를 표하는 등 저자세로 일관한 반면, 화물연대 등 노동자 투쟁에는 강경한 탄압으로 돌아섰다. 2003년 말 노무현 지지율은 2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특히 진보적 지지층이 붕괴했다. 노무현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불평했다.

우파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004년 국회에서 노무현 탄핵안을 발의하고 가결시켰다. 탄핵의 표면적인 명분은 노무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부당한 사유였다)이었지만, 탄핵소추안에는 “파병 선언 뒤 반전 입장 표명”도 포함됐다. 탄핵에는 한나라당(현 국힘)뿐 아니라 새천년민주당도 가담했다. 추미애가 바로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상임중앙위원이었다.

현재 이재명도 취임 1년 3개월 만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정부의 등장 이유라 할 수 있는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은 별 진전이 없이 낙제점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을 편 들고 ‘위안부’ 피해자를 내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지속·확대하면서 ‘자주적 외교’도 사실상 파탄 났다. 정부 인사의 무게중심도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란 전쟁에 참전까지 하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위기에 김민석 자신도 한몫했다. 그는 국무총리일 때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반면, 경총 기업주들을 만나서는 “원팀 코리아”를 외쳤다(올해 2월). 당 대표가 돼서는 극우 장동혁을 만나 “실



개혁 배신이 부른 위기 “탄핵 전조” 앞세워 정부 비판 차단하려는 김민석

제로는 좋아한다”며 “인품 좋은 리더”라고 공개적으로 추켜세웠다. 지금도 김민석은 파병 반대를 표명하기는커녕 민주당 내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

그래 놓고는 “노무현 탄핵 전조” 운운하며, 좌파 쪽을 향해 노무현 탄핵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우파만 이로우니 저항을 삼가라는 것이다.

진보적 지지층 배신의 후과

그러나 김민석이 소환한 2004년의 교훈은 정반대다. 2연속 대선 패배와 대선자금 수사로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던 한나라당이 되살아나 노무현 탄핵에까지 나선 것은 그가 너무 독심 있게 개혁을 추진해서가 아니라, 개혁을 배신하고 우경화하며 자기 지지기반을 스스로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우파에게 거둬 양보했지만, 우파는 노무현 정부의 지지층이 이반한 것을 이용해 노무현을 공격할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지금도 비슷하다. 미국 제국주의 전쟁에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저울질했던) 윤석열도 못 했던 일

이다(물론 그의 임기가 계속됐다면 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민주당의 우당들인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과 참여연대 등 엔지오들도 모두 파병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비판보다 미국의 압박에 대한 규탄이 압도적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현재 이재명 정부의 위기에서 득을 보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좌파보다는 극우다. 극우는 단호하게 이재명에 반대해 우파 저변을 확장하는 반면, 반미자주파와 엔지오들은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민중전선 전략 때문에 실망하는 개혁 염원층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파병 반대 운동을 건설하면서도 파병 결정의 당사자인 이재명 정부를 정면 겨냥하기를 한사코 꺼린다. 진보당계와 참여연대 등 주류 엔지오들이 주도한 9월 12일 파병반대평화행동의 집회는 미국의 파병 압박을 압도적으로 강조하며 청와대 앞에서 “쫓지 마라”고 외쳤다. 이재명 정부는 반전 여론에 별로 ‘쫓지 않고’ 파병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있는데 말이다.

성지현

▶ 12면에서 이어짐

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대칭적인 관계가 아니다. 선출된 정부와 국가 기구는 계급들 사이에 중립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정부는 자본 축적과 자국 자본의 경쟁력 유지에 이해관계를 갖

기 때문에, 개별 자본가들과 충돌할 때조차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가 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특히 전쟁과 같은 결정적 문제에서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정부의 판단을 믿거나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데 자신의 전술을 종속시

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지배계급을 설득하려는 책략을 비판했다. 그 책략에 따르면, “사회의 상층부, 또는 그 가운데 선의를 가진 사람들만이라도 설득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겁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단호한 정치적 반대 대신 일반적인 중재, 정부와 부르주아지에 맞선 투쟁 대신 그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설득하려는 시도”가 중시된다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지적했다. 즉, 계급투쟁을 약화시키는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역자 서평 | 《마오쩌둥의 중국 국가자본주의》

마오쩌둥 시대 중국과 마오쩌둥주의의 실체를 드러내는 책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경쟁이 점점 격화하면서 중국과 마오쩌둥주의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막가파’ 식의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이 더 낫다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 마오쩌둥주의는 중국을 저개발 국가에서 발전시켜 기아를 없앴을 뿐 아니라 제3세계를 구원할 혁명적 이념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오쩌둥주의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책이 곧 출간된다. 나이절 해리스가 쓴 《마오쩌둥의 중국 국가자본주의》(책갈피)가 그것이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이 1949년에 권력을 장악하기까지 겪은 일들, 신중국 정부가 등장하면서 맞닥뜨린 여러 문제들, 신중국 하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처지, 그리고 중국 대외정책의 의미와 제3세계에서 마오쩌둥주의가 수행한 구실들을 다루고 있다.

1921년에 창당한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의 연합 노선 때문에 1925~1927년 최초의 노동자 혁명을 실패로 이끌었고, 뒤이어 코민테른 3기의 초좌익주의 노선을 중국에 펼치면서 그나마 있던 노동자 계급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다.

중국공산당은 장제스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서부의 오지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대장정’이라 부른다.

이렇게 오지로 도망간 중국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에 뿌리를 둔 혁명정당에서 농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정당으로 변모했고, 마오쩌둥주의가 당내 주도권을 장악했다.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서부의 점령 지역에서 온건한 토지개혁을 추진했고, 항일 전쟁을 첫째 과제로 제시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확대해 갔다.

1949년에 공산당이 신중국을 건설했을 때 최우선 과제는 강력한 국민국가 건설이었다. 여전히 중국공산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중국이 노동자

가 농민을 지도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을 쥐어짠, 그로부터 얻은 잉여로 중공업과 무기 생산에 집중했다.

중국공산당은 1950년대 중반 도시에서는 국유화에 기반한 산업 기반을 갖췄고, 농촌에서는 인민공사를 설립하면서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했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생산과 분배 등에서 노동자 통제가 없다면 국유화는 자본주의 합리화나 기성 지배계급의 입지 강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한다.

이 책은 마오쩌둥이 통치하던 시절 3,000만 명 이상을 아사로 죽게 만든 대약진운동,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반우파 투쟁, 마오쩌둥 자신의 권력 회복을 위한 문화혁명 등의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

천명

이 책의 장점 하나는 마오쩌둥 시절 노동자와 농민의 일상 생활이 얼마나 암울하고 숨 막혔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오쩌둥이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막 등장한 신생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대명령 때문이었다. 그 절대명령이 바로 이 책의 원제인 천명(天命, 하늘의 명령)이다.

마오쩌둥은 미소 대립이라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강대국 사이를 줄타기했다. 그 극적인 결과는 1979년 미국과의 수교였다. 마오쩌둥은 소련이라는 유일 초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에 맞서 나머지 국가들이 단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1965년에 마오쩌둥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미국에 아첨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영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이 제3세계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 지도자들은



마오쩌둥이 이끈 공산당은 강력한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을 쥐어짠다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지도자인 양행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제3세계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거나 애쓴 적이 없었다.

중국이 제3세계를 중요시한 사건으로 1955년 반동회의가 거론되지만, 이것을 계기로 중국이 제3세계 민중들의 운동을 실질적으로 지지한 사례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모잠비크해방전선, 앙골라민족해방전선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원했던 중동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전부였다.

사실 중국의 대외 정책은 상대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평화 공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제국주의에 맞선 동맹 세력은 제3세계 국가 안의 억압당하고 착취받는 노동자·농민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계급들이었다.

연속성

이 책은 1978년에 출판됐기 때문에 당시의 중국 내부 상황과 대외정책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는 중요한 사건들도 많이 접할 수 있다. 마오쩌둥이 직접 통치했던 시절의 사회적 모순, 억압과 폭력, 약탈과 착취 등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다.



나이절 해리스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544쪽, 29,000원

물론 이 책은 중국 사회가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급속하게 변모한 일을 다룰 수 없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국유기업을 민영화했으며, 많은 공공영역을 시장에 내맡겼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자본가들의 입당을 대폭 허용하면서 이제 노동자·농민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1978년에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 사회가 많이 변화했음지라도 중국 사회의 핵심 성격은 그대로이다. 국가 부문의 영향력이 강력한 국가자본주의,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착취에 기반한 사회,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통치 체제 등은 1978년을 기점으로 연속성이 더 두드러진다.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이끌고 만든 중국 사회의 성격이 지속되는 동안 마오쩌둥주의의 본 모습을 폭로하는 이 책의 유용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AI 개발 속도 조절론

카르텔 이권을 수호하려는
미국 거대 AI 기업들의 시도

인공지능(AI)을 통제하지 못해 인류가 파멸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최근 거대 AI 기업 엔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콥 콕슨은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원의 우려는 거대 AI 기업 수장들이 동조하면서 더욱 크게 확산됐다. 예를 들어,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AI의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픈AI의 샘 올트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구글 답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등 거대 AI 기업의 CEO들이 모두 동의했다. 첨단 AI 개발 경쟁을 벌여 온 4개사 수장이 한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AI가 인간과 다른 의지를 지니고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현재 AI가 수행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의지는커녕 인간과 같은 맥락적 이해나 직관, 감정, 자의식을 갖추지 못한다.

물론 우리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을 흔히 경험한다. 챗GPT, 제미니, 클로드 등을 이용해 보면 알 수 있듯, 이용자가 지시한 규정을 벗어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AI가 의지나 자의식을 지녀서가 아니라, AI 모델이 수많은 매개변수를 조정해 통계적 오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기술적 오류다. 즉, AI의 우월성이 아니라 현재의 AI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나는 일이다.

물론 AI가 인간의 지시와 규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는 AI의 성능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나 이를 책임져야 할 거대 AI 기업들은 이를 제대로 못해 내고 있다. 현재 AI 모델 자체에 근본적 결함이 있



미국과 중국 정부는 경제적·군사적 패권 경쟁을 위해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을 뿐 아니라, 시장 선점 경쟁 탓에 충분한 검증과 조절을 거치지 않은 채 제품을 성급히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엔트로픽은 자사의 AI 모델을 악용한 사례들을 발표하며 AI 규제를 역설했다. 생물학 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바이러스·독성물질 연구나 예멘 후티의 미사일 개발 연구에 사용하려던 시도들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군사적 악용은 각 기업들이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막으면 될 일이다. 오히려 문제는 미국 AI 기업들이 겉으로만 반대 입장을 내고 실제로는 미국 정부의 군사적 사용에 적극 협력해 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거대 AI 기업들이 AI 개발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경쟁적 투자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즉, 치열한 반도체·전력 확보 경쟁과 고금리 부담 속에서 거액의 투자를 이어 가야 하는 AI 선두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경쟁사의 추격을 차단해 한숨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요 AI 기업들의 AI 투자는 2025~2026년에 걸쳐 폭증하는 추세이며, 전체 AI 투자는 2026년 기준 6,000억~7,000억 달러(한화 약 800조~95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이런 막대한 투자에 따른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각 기업들

은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막상 거대 AI 기업들은 AI 투자를 늦출 생각이 없다. AI 위협론이 제기된 직후 엔트로픽은 올해 내에 주식을 상장해 더 많은 투자금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오픈AI는 상장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AI 규제를 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상장할 수 있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경쟁

한편, AI 개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런 주장이 “역겨운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트럼프는 “[속도 조절론을] 기뻐할 유일한 나라는 중국뿐”이라며 “AI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시 주석이 미국의 AI 개발 속도 늦추기를 인류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중국이 AI 주도권을 쥔 절호의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지배자들 대다수가 AI 개발에서 앞서 나가는 것을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패권을 유지할 길로 보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은 상당 부분이 AI 투자 증대에 의해 유지되고 있

을 뿐 아니라, 미국 지배자들은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이 미국의 경제적 패권 유지에 필수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AI 개발을 위한 투자 지원에 큰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 AI 기술이 갈수록 군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간 군사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AI 개발 경쟁은 멈출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 정부도 AI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AI의 군사적 이용을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 AI의 정보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전략으로 신흥국·개도국의 AI 개발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AI 기술 독점을 깨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싼 가격에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분을 챙김과 동시에 중국 AI 기술 표준을 확산시켜 전 세계 AI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전략이다.

AI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경제적·군사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공격하려 해서가 아니다. 계속되는 AI 투자 붐이 세계 경제를 강타할 수 있는 경제적 거품을 키우고, AI 개발로 더한층 격화되는 군사적 경쟁이 전쟁의 위험을 키우기 때문이다.

즉,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AI의 자본주의적·제국주의적 이용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강동훈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간결** 중국은 왜 제국주의 국가인가
- ★ **현대중공업 부분 파업: 역대급 실적에 걸맞게 임금을 인상하라**
- ★ **생활고: 이재명 정부 참전으로 보통 사람들이 치를 또 하나의 대가**



기후 위기도, AI 투자도, 핵발전 명분 못 된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짓기로 올해 초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6월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해 향후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지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AI 개발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핵발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사진)는 어느 쪽도 핵발전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우선 '원자력 발전'이 잘못된 용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라늄 핵분열에서 나온 열로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므로, 정확히는 '핵분열 화력발전', 줄여서 '핵발전'이라 불러야 한다.

핵발전은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발전 과정에서 온실기체 배출은 적지만 우라늄 채굴과 정련 과정에서 상당량이 배출되고, 재생에너지인 햇빛·바람 발전에 비하면 배출량이 훨씬 많다.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도 남는다. 건설 기간도 문제다. 한국처럼 안전과 노동권을 무시한 채 지어도 13년은 걸리고, 다른 나라는 20년이 넘는다. 당장의 AI 개발을 위해 13년 뒤 가동될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라늄 매장량도 제한돼 있고, 수명이 다한 발전소 폐쇄에는 1기당 수조 원이 든다.

고속증식로나 재처리로 핵연료를 무한히 쓸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프랑스 슈퍼피닉스, 일본 문주, 독일의 증식로 모두 막대한 비용만 쓰고 폐쇄됐다. 사용후 재처리 연료(MOX)는 천연 우라늄보다 훨씬 비싸고 폐기물을 오히려 늘린다. 그럼에도 재처리를 하는 진정한 이유는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서다. 일본은 후쿠시마 삼중수소 방류를 무해한 것처럼 포장한다. 그 배경에 로카쇼 재처리 공장 가동을 앞두고 경계심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이 든다. 삼중수소는 단백질이나

DNA에 결합해 최대 2년까지 몸에 남아 방사선을 낼 수 있다.

소형 모듈 원전(SMR)도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은 설비 규모가 클수록 경제성이 있는데 SMR은 건설비가 대형 핵발전소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 발전량은 10분의 1이다. 경제성을 위해 여러 기를 모아 놓으면 하나만 사고가 나도 나머지를 제어할 수 없어 대형 핵발전소 사고와 다를 바 없어진다. 수출 명분도 허약하다. 한 기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5,000억 원을 줘야 하고, 아랍에미리트 사업은 실제로 적자가 쌓이고 있다.

과학은 없고 돈만 있다

정부가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핵융합은 실용화가 더욱 요원하다. 1억 도의 온도와 높은 밀도, 충분한 지속 시간이라는 로슨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실험실에서도 어렵다. 미국은 50년간 막대한 자원을 쓰다 사실상 포기했고, 국제 공동 연구인 이터(ITER)는 완공이 20년 가까이 늦춰져 실험실 규모의 결과도 2050년쯤에나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케이스타'는 가동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핵융합 반응을 48초 유지한 게 최고 기록이다. 에너지 산업 목적의 핵융합 투자는 말이 안 된다. 물론 연구용으로 세계가 함께 하나 정도 해 보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다.

AI 정책도 방향이 잘못됐다. 챗GPT

같은 큰 언어 모형(LLM)은 사용자의 80~90퍼센트가 소비용으로 쓰는 탓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고, 사용자 비위를 맞추느라 사실이 아닌 말도 한다. 환각률을 1퍼센트에서 0.01퍼센트로 낮추려면 훈련을 100만 배, 전력을 1000배 이상 더 써야 하고, LLM이 만든 자료로 다시 학습하면 성능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다. 지적 훈련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비서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자본으로 경쟁하는 중앙집중식 LLM을 따라가기보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특정 기능에 특화된 수직 AI에 주력하고 주권 AI는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핵발전도 핵융합도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가장 힘을 쏟아야 할 곳은 재생에너지다. 햇빛 발전 효율은 5~7퍼센트에서 40퍼센트 가까이 올랐고, 균등화 발전비용(LCOE)*으로 보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햇빛 발전이 가장 싸고 핵발전이 가장 비싸다.

유일한 예외가 안전과 노동권, 자금 조달,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낮춰 잡는 한국이다. 최근 핵발전소를 많이 지은 중국도 재생에너지 증가량이 핵발전 증가량의 100배에 이른다. 다만 에너지는

기본권이므로 공공성이 필수다. 문재인 정부는 햇빛 발전을 사유화해 산림 훼손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햇빛 발전은 전력을 많이 쓰는 도시의 건물 지붕, 주차장, 도로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현 정부가 과학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점이 가장 실망스럽다. 과학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부터 고쳐야 한다. 과학의 진정한 목적은 정신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AI가 과학기술의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놓인 현실도 거꾸로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가을 핵발전 신규 건설이 십몇 년 걸려 의미가 없다고 했다가 완전히 입장을 바꿨다.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미국 정부가 법으로 유출을 막고 있으니, 한국은 콘크리트 타설밖에 못 한다. 결국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두산과 현대에만 좋은 일이 될 것 같다.

이 글의 바탕이 된 최무영 교수의 인터뷰를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용어설명

균등화 발전비용(LCOE)

건설, 유지보수, 연료 공급, 폐쇄 등 발전소 생애 전체에 걸친 비용

초청 강연

핵발전과 SMR, 그리고 핵융합: 핵에너지 제대로 알기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에게서 듣는다

일시 9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 전문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종각역 5번출구 도보 5분)

참가비 6,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지역모임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